

26-01(통권 1002호) 2026.01.02

경제주평

■ 2026년 국내 트렌드

-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목 차

■ 2026년 국내 트렌드

-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6년 국내 트렌드	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해 정 수 석 연 구 위 원 (2072-6226, hjlee@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6년 국내 트렌드

-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 개 요

2026년 국내 트렌드는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경제, 남북경협, 규제(제도), 산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7개 이슈를 선정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영업 서바이벌’,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등 4개 트렌드를 선정했다. 남북경협은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를, 규제(제도)는 ‘더 오래 더 여유롭게’를,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은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을 선정했다.

■ 2026년 국내 트렌드

①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대내외 여건상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잠재성장률 3%대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갈등 해소 지연 등과 같은 성장 하방 리스크가 다수 존재한다. 대내적으로도 2% 정도 수준으로 성장률이 수렴해 갈 것이라는 중기 경제 전망과 현재 한국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일본과 독일은 물론 미국 등 G7 국가로 확장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 이상 성장하거나 기대되는 사례가 없다.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실질 경제성장률과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투자 정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성장목표 달성은 아주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성장목표를 고려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는 2021~2025년 0.3%p 정도에서 2031~2035년에는 2.0%p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1~2015년의 투입 요소별 성장기여 수준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투자 및 노동 투입의 감소, 생산성의 하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애로, 낙후된 제도와 규제 효율성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 선결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GDP의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국가부채 수준이 2030년에는 60%로 상승해 OECD 권고 수준인 70.7%에 빠르게 근접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우려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경제·사회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

련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②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2025년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p를 돌파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월 2,400p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10월 27일 처음으로 4,000p를 상회했으며, 12월 12일 기준 4,150p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권 주택매매가격도 최근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2024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25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 상승 및 코스피 지수 5,000p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내구재·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부문이 회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산효과를 보였다. 한국의 자산효과는 연구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자산효과가 현실화된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자산효과는 비내구재보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자산시장 활성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산효과가 일시적 가격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간소비 확대와 내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자영업 서바이벌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은 최근 위기에 직면하며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하회하였다. 이에 따라 폐업사업자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내수 경기 부진에 취약한 소매업 및 음식업의 폐업률이 각각 16.7%, 1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24년 22.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자영업은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④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교역 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상수지 대부분은 상품수지가 설명해 왔으나, 최근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며 경상수지의 한 축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본원소득수지는 2011년(54억 달러)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25년에도 이자 및 배당 등 투자소득 수입이 지급을 상회하며, 10월 누계 기준 274억 달러로 2024년 역대 최고 연간 규모(286억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다.

향후 상품수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이 전망되어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출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한 가운데 미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상품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로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56.3%까지 확대되는 등 이자·배당 수입의 구조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상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완충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상호 연동시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Efficiency)·연계(Network)·개발(Development)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의 체제 수용성,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와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거점으로 철도·도로 연계를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적·기술적 협력 통로를 고민해야 한다. **평화공존공동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⑥ 더 오래 더 여유롭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주당 36시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늘리되 노동의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으로 고용 구조, 업무 운영 방식 등 노동 환경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부족,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현행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효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안정 및 빈곤 완화, 숙련 인력 활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정년 연장 수혜 계층 간 격차,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주 4.5일제는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조정, 근무 시간 배분, 기업 운영 부담 등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워라벨(Work-life balance) 증진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임금 삭감 여부, 기업 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직무별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기술 도입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활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기업의 비중이 2019년 2.5% 수준에서 2023년 30.3%까지 확대되어 OECD 국가 평균(14.0%)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 또한 2024년 기준 24.0%로 개인 차원의 4차 산업 기술 활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술 도입 확산에 따라 전체 사업체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비중이 산업 전반에서 확대되었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타 산업으로의 확산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이어지며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AI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력 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1. 개요

- 2026년 국내 트렌드는 ‘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을 주제로 경제, 남북경협, 규제(제도), 산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7개 이슈를 선정
 - 경제 부문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영업 서바이벌’,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등 4개 트렌드를 선정
 - 남북경협 부문은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 를 선정
 - 규제(제도) 부문은 ‘더 오래 더 여유롭게’ 를 선정
 - 산업 부문은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을 선정

< 2026년 국내 트렌드 >

	주제	내용
경제	1.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대내외 여건상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2.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주식시장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
	3. 자영업 서바이벌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판단
	4.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교역 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남북경협	5.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	▶정부는 E.N.D 구상을 통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상호 연동시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
규제(제도)	6. 더 오래 더 여유롭게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
산업	7.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기술 도입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

2. 2026년 국내 트렌드

①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 (의미) 대내외 여건상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성장 경로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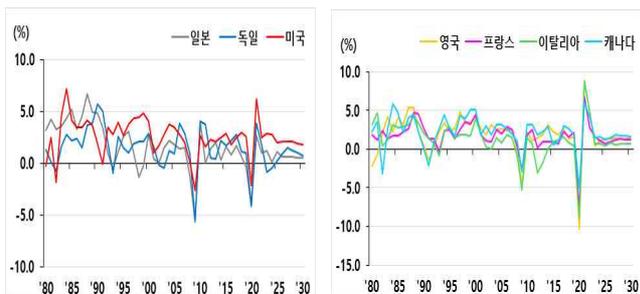
-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미중 갈등 해소 지연 등과 같은 성장 하방 리스크가 다수 존재
- 한국경제에 대한 중기 경제 전망과 현재 한국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은 상황
 -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고,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
 -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일본과 독일은 물론 미국 등 G7 국가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음

<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

< G7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 (내용) 잠재성장률과 실질 경제성장률과의 괴리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낮은 시장 효율성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나 정부 역할은 제한적

- 2035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
 - 정부의 성장목표를 실질 경제성장률로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간 차이는 2021~2025년 0.3%p에서 2026~2030년 1.4%p, 2031~2035년 2.0%p로 확대, 정부 성장목표치가 잠재성장률을 대폭 상회하는 상황

<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 한국의 요인별 성장(잠재)기여도 >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6년부터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정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11~2015년의 투입 요소별 성장기여 수준을 복원할 필요가 있으나, 산적한 대내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¹⁾

-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급증, 향후에도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등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을 전망
- 노동 투입도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축소(2012년 73.4%로 정점, 2030년 66.6%, 2050년 51.9%)와 더불어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전산업 시간당 2013~2017년 2.8%, 2018~2023년 2.5%로 하락세
- 한편, 주요 국가전략기술 수준 대부분이 최고기술국과 적어도 13년 이상 떨어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25년 IMD 부문별 국가경쟁력 중 기업 효율성 순위가 44위, 정부 효율성 31위로 시장 효율성마저 낙후
- 게다가 현재 GDP의 약 50% 수준으로 알려진 국가부채 수준은 2030년에 60% 정도로 상승해, OECD 권고 수준인 70.7%에 빠르게 근접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약화될 우려도 큰 상황

○ (시사점) 3%대 성장 경로 복귀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경제·사회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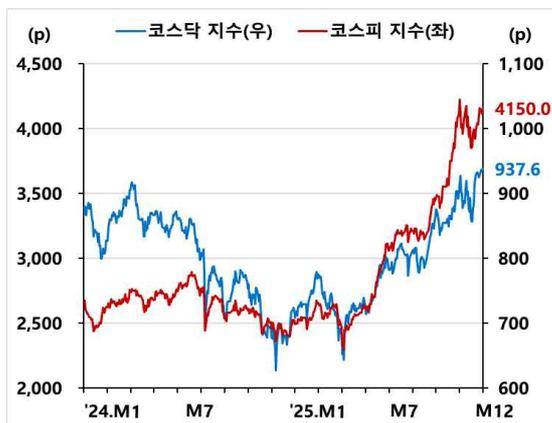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1) 이하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국은행 DB, 국가데이터처 DB, 한국생산성본부, 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5.09; KISTEP, 2022년 기술수준평가, 2023.01.02.; IMD, World Competitiveness Index;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②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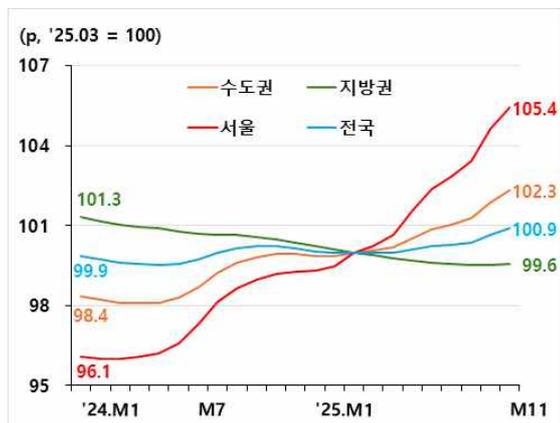
- (의미)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확대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
- (내용) 최근 주식시장 상승 및 코스피 지수 5,000p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내구재·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부문이 회복할 가능성
 - 2025년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p를 돌파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월 2,400p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인해 10월 27일 처음으로 4,000p를 상회함
 - 12월 12일 기준 4,150p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약 73%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임
 -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권 주택매매가격도 최근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
 -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2024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25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가 지속
 -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던 지방권 역시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소폭의 플러스 전환 흐름이 나타나는 등 주택가격 회복세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 중임

<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



자료 : Bloomberg.

<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



자료 :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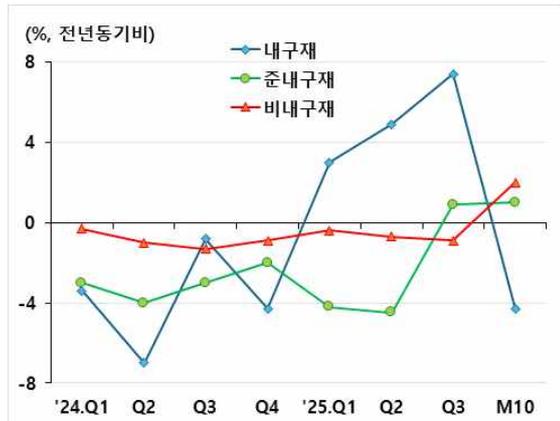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자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자산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자산효과는 연구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향후 2026년에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자산효과가 현실화된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
 -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 판매는 최근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남
 - 일반적으로 자산효과는 비내구재보다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 증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자산효과를 통해 민간소비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자산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

구분	자산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때 소비 증가율	
	주식	주택
김기호 (2019)	양(+) 의 효과	음(-) 의 효과
김병화, 문소상(2001)	0.06%p 상승	0.36%p 상승
이승윤 (2020)	-	0.19%p 상승
조성원 (2006)	0.05%p 상승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 국가데이터처.

○ (시사점) 정부는 자산시장 활성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산효과가 일시적 가격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민간 소비 확대와 내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함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2)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수준, 주택소유 형태, 금융자산 보유 비중 등에 따라 자산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 시기별·가구 특성 등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자영업 서바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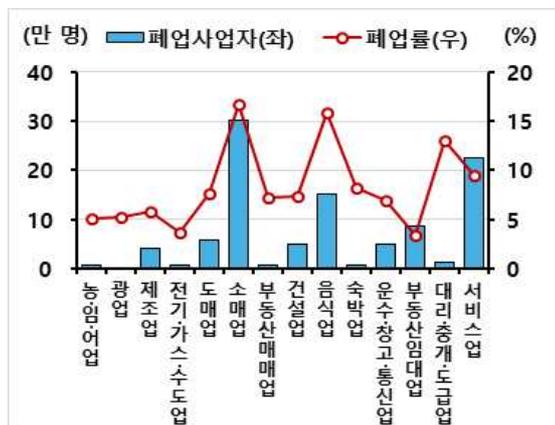
- (의미)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직면
 - 창업과 고용의 기반이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은 최근 위기에 직면하며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음
- (내용)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으로 보임
 -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하회
 -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1989년부터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 처음으로 20%를 하회하며 자영업 위기 우려가 확산
 - 2025년(1~11월 평균)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며 그 비율은 19.5%까지 하락
 - 이에 따라 폐업사업자는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
 - 2024년 기준 폐업사업자는 약 100만 8,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폐업률은 2년 연속 9.0%를 상회
 - 특히, 내수 경기 부진에 취약한 소매업 및 음식업의 폐업률이 각각 16.7%, 1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 : 2025년은 2025년 1~11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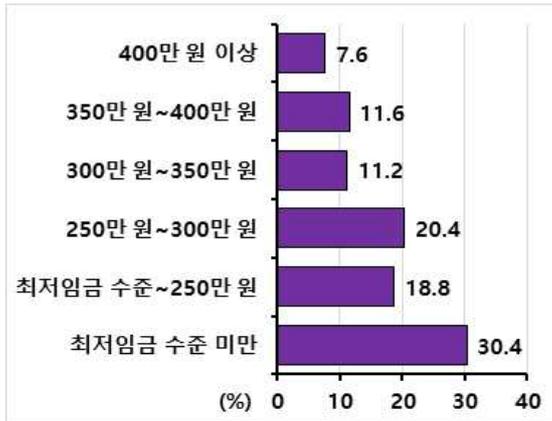
< 업태별 폐업사업자 및 폐업률 >



자료 : 국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2024년 기준.
2) 폐업률 = 폐업사업자 / (기동사업자 + 폐업사업자)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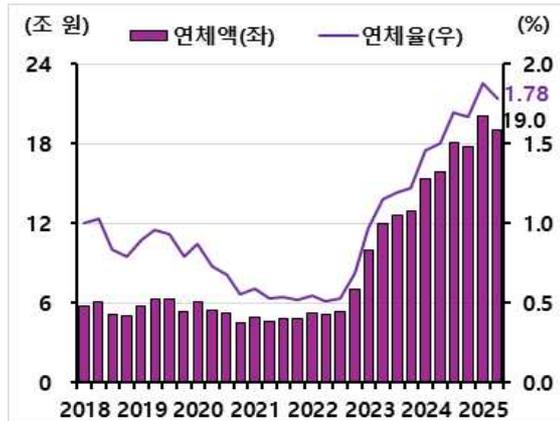
- 낮은 소득 수준,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0.4%는 소득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96,27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환 능력 약화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2025년 2분기 약 19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연체율은 1.78%까지 상승
- 한편,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임
 -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³⁾은 2024년 22.9%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 자영업자 비율(2024년, OECD): 미국 6.2%, 캐나다 6.7% 독일 8.3% 일본 9.2%
 - 현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자영업은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2025), 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
 주 : 최저임금 수준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96,270원.

<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및 연체율 >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말 기준.

○ (시사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할 필요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3) OECD 기준은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로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를 포함.

④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 (의미) 교역 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 통상 여건 변화로 상품수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본원소득수지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경우 경상수지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내용) 과거 경상수지 대부분은 상품수지가 설명해 왔으나, 최근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며 경상수지의 한 축으로 부상

- 상품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전환을 계기로 두 번째로 큰 구성 항목으로 확대

· 경상수지는 2010년까지만 해도 상품수지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적자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상품수지(1,001억 달러)와 본원소득수지(266억 달러)를 두 축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990억 달러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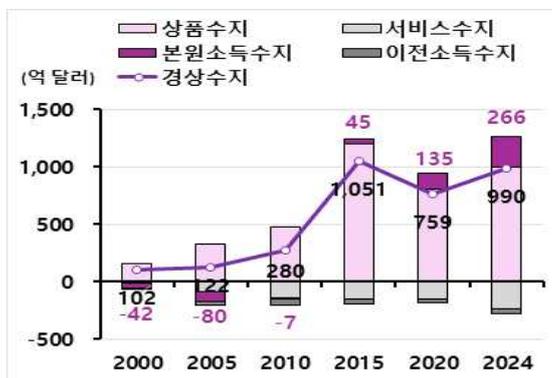
· 특히, 2010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본원소득수지는 2011년(54억 달러) 흑자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경상수지 흑자 기여도가 크게 확대

· 이는 수출 경기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품수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최근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 개선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도 투자소득수지는 전년대비 호조 흐름을 지속 중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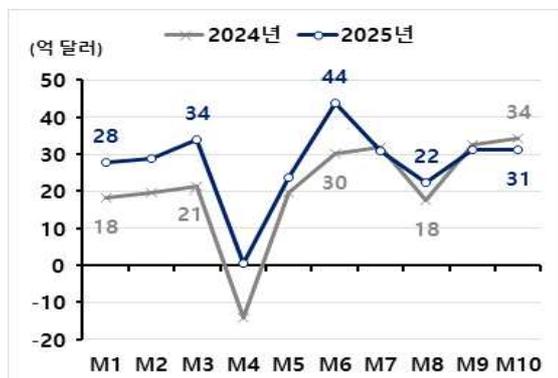
· 2025년에도 이자 및 배당 등 투자소득 수입이 지급을 상회하며, 10월 누계 기준 274억 달러로 2024년 역대 최고 연간 규모(286억 달러)에 근접

< 2000년 이후 경상수지 구조 >



자료 : 한국은행.

< 월별 투자소득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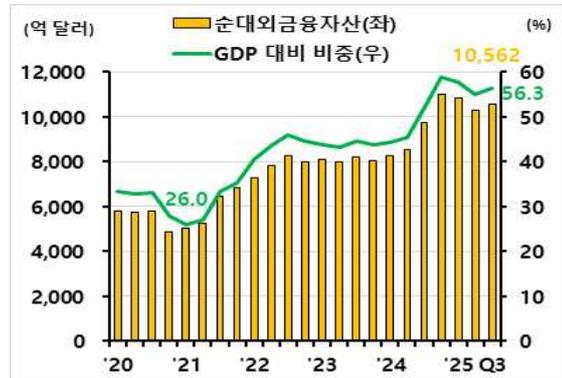
- 최근 상품수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편, 본원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 증가세를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전망됨
 - 10월 반도체 수출은 국내 총수출 증가에 5.5%p를 기여한 반면, 반도체 외 품목은 $\Delta 2.0\%p$ 의 기여도를 기록하며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
 - 이러한 수출 구조에서는 美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상품수지 개선을 이끌어온 수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
 - 한편,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해외투자 확대로 순대외금융자산이 GDP의 56.3%까지 확대되는 등 이자·배당 수입의 구조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

< 수출 증가율 및 반도체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반도체는 MTI 3단위 기준.

< 순대외금융자산 및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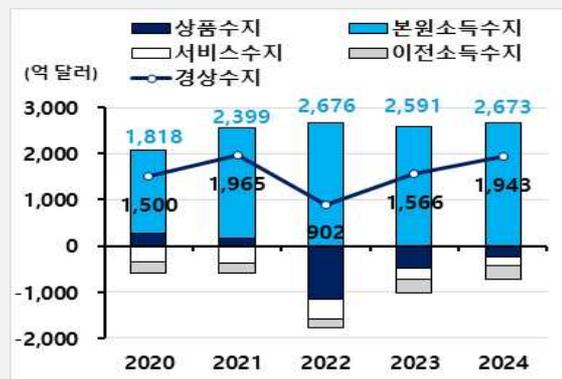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2025년 비중은 2024년 GDP 대체 적용.

○ (시사점)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완충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

< BOX >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

- 일본은 상품수지 적지에도 대규모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사례와 같이 상품수지의 대규모 적자($\Delta 1,157$ 억 달러) 발생에도, 본원소득수지(2,676억 달러)가 흑자를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⑤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

○ (의미)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상호 연동시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는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고민 필요

-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교착 중인 한반도의 주요 쟁점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
 - 정부는 관광,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발전적 재개 의지로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확대 편성, 3년 만에 1조 원대 회복
 - 이에 E.N.D 구상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Efficiency)·연계(Network)·개발(Development)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내용)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Efficiency)·연계(Network)·개발(Development) 과제가 필요

- 실효성 있는(Efficiency) 과제: 남북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의 체제 수용성,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 단계별 설계가 필요

< 2026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 억 원)

구분	2025년 사업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액	전체 예산대비 비중(%)
합 계	7,981	10,001	2,020 (25.3%)	100.0
통일정책	50	52	2 (3.0%)	0.5
남북사회문화교류	104	104	0 (0.0%)	1.0
인도적 문제해결	6,015	6,810	795 (13.2%)	68.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12	3,035	1,225 (67.6%)	30.4

자료 : 통일부.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률.

-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업, 환경,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되 향후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에 맞춰 경공업(제조업) 등 생산 기반 분야로의 점진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제재 면제 가능성과 국제사회 수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형 ‘소프트 협력’ 이 우선 추진 가능함
 - 중장기 협력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후를 전제로, 북한 지역의 산업·생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계(Network) 과제** : 평화경제특구와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거점으로 철도·도로 연계, 국제사회와의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 평화경제특구와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를 거점으로 남북 접경 지역을 연결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복원 사업 추진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고민할 수 있음
- **개발(Development) 과제**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실무적·기술적 협력 통로를 모색
- 단기적으로는 국제기구나 비정치적 NGO 채널을 통한 간접 연계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이 보유한 국제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사점) 평화공존공동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재개를 모색할 필요
-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중 민생 관련 분야(농업, 보건,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이 낮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 해 정 수석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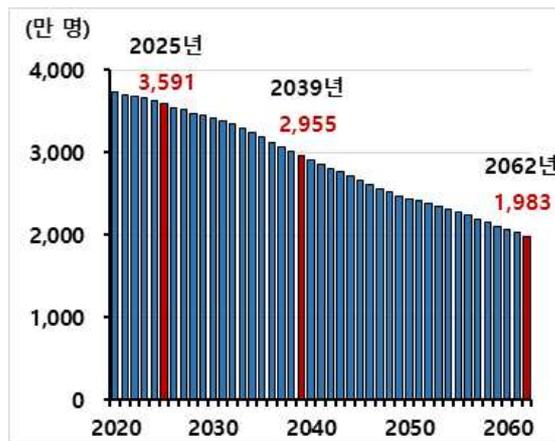
⑥ 더 오래 더 여유롭게

- (의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주당 36시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
 -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늘리되 노동의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으로 고용 구조, 업무 운영 방식 등 노동 환경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변화가 나타날 전망
- (정년 연장) 노동력 부족,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 (배경)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현행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39년에는 3,000만 명을 하회할 전망
 -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 시작으로 노동력 부족 심화
 - 또한,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 발생 문제
 - (주요 쟁점) 계속 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효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 존재
 - 고령층의 고용안정 및 빈곤 완화, 숙련 인력 활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정년 연장 수혜 계층 간 격차,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됨
 - (추진 계획)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세대상생 정년 연장 추진⁴⁾
- (주 4.5일제)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조정, 근무 시간 배분, 기업 운영 부담 등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

4)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25.12.11.).

- (배경) 생산성 향상, 워라벨(Work-life balance) 증진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
 - 주요국에 비해 높은 근로 시간(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주요 쟁점) 임금 삭감 여부, 기업 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특히, 대기업 및 특정 업종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 (추진 계획)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 추진⁵⁾
 -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720개소, 324억 원)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 발굴·확산,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마련 등

< 생산연령인구(15-64세) 추이 및 전망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 : 2023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 연간 1인당 근로 시간 >



자료 : OECD.
주 : 2024년 기준.

○ (시사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직무별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5)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25.12.11.).

⑦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 (의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기술 도입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내용) 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일상화하면서, 향후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활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I 도입 기업 비중은 2019년 2.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23년 30.3%까지 확대되었으며, OECD 국가 평균(14.0%)을 크게 상회
- 또한, 로봇 밀도(근로자 만 명당 로봇 수)는 1,012대로 세계 평균인 162대를 크게 웃돌아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능정보화사회 이용자 패널조사(2024)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전년대비 11.7%p 상승한 24.0%로 나타나 개인 차원에서 4차 산업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I 사용 기업 비중 >



자료 : OECD ICT Access and Usage.
주 : 10인 이상 기업 기준.

< 국가별 제조업 로봇 밀도 >



자료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World Robotics(2024).

- 이와 같은 기술 도입 확산에 따라 전체 사업체 중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비중도 산업 전반에서 확대된 모습

- AI·클라우드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2022년 14.2%에서 2023년 18.2%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전 산업에서 그 비중이 확대
- 또한, 전체 4차 산업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기준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타 산업으로의 확산도 점진적으로 진행

< 전체 사업체 중 4차 산업 기업 비중 > < 4차 산업 기업의 산업별 분포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



자료 : 국가데이터처, 기업활동조사.

- 연구개발 투자 측면에서도 AI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이어지며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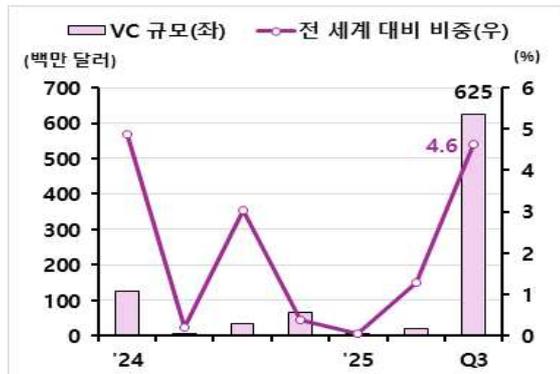
- 한국 정부는 2026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편성하며, 전략기술과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기술 분야인 생성형 AI에 대한 VC 투자 규모가 2025년 3분기 기준 6.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부문에서도 AI·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26년 정부 R&D 예산(단위: 조 원) >

	2025	2026
R&D	29.6	35.3
주요 연구개발	24.8	30.1
인공지능	1.1	2.3
에너지	2.2	2.6
전략기술	6.5	8.5
방산	3.1	3.9
중소벤처	2.4	3.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성형 AI에 대한 VC 투자 >



자료 : OECD.AI(2025).

○ (시사점) AI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發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력 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병행될 필요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